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2017.6.17 시행)〉

〈출제 비중〉

제1편 행정학총론	4문항	제5편 재무행정론	3문항
제2편 정책론	3문항	제6편 행정환류론	-
제3편 조직론	3문항	제7편 지방행정론	3문항
제4편 인사행정론	4문항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학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특별히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대부분 강의와 교재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아주 지엽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론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학으로 공부하신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정답> ③

해설> ③ [X] 상황과 문제에 맞게 규제 방식은 다양화하되,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수단규제보다는 성과규제로 전환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②④는 모두 규제개혁의 옳은 방향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229

[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정답> ②

해설> ② [O]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소외집단을 돕기 위한 정책·공익목적을 위한 정부규제정책 등을 선호한다.

① [X]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한다.

③ [X]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X]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약화되었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구 분	진보주의(평등주의, 좌파)	보수주의(자유주의, 우파)
인간관	·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인간관을 전제 · 인간의 비현실적인 냉혹함과 계산방식 때문에 경제인의 인간관을 부정	· 오류의 가능성 없는 인간관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을 전제
가치판단	· 자유를 열렬히 옹호(여기서 자유는 정부에로의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를 중시	· 자유를 강조(여기서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 · 소득, 부(富) 또는 경제적 결과의 평등은 경시 · 교환적(평균적) 정의(거래의 공정성)를 중시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과 윤리성 결여를 인지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봄 ·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개입을 허용	·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 ·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존재로 봄
선호하는 정책	· 소외집단을 돕기 위한 정책 · 공익목적을 위한 정부규제정책을 선호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옹호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반대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반대	· 소외집단 지원정책 비선호 · 정부규제(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시장지향의 정책을 선호 · 조세 감면 내지는 완화를 강조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찬성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찬성
비 고	·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 진보주의, 규제된 자본주의, 개혁주의와 관련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기독교적 보수주의와 관련

▶ 2017 비전행정학 p.173

[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O] 2016년 「공무원 윤리헌장」에서 명칭이 바뀐 「공무원 헌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직가치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X]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높다.
- ③ [X]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④ [X]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

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자율규제윤리		공무원헌장
판 형 적 · 강 제 적 규 제 법 리	헌 법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 · 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등록의무 :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의무 : 1급 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 · 부기관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함. ② 선물수령의 신고 및 국고귀속 ③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정한 기관(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됨. ⑥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 · 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내부고발자보호제도)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함.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	------------------------------------------------------

공무원 헌장
<p>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p> <p>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p> <p>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p>

▶ 2017 비전행정학 p.939

[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ㄷ. 정책 델파이 ㄹ. 정보의 충분한 획득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③ [O] 이론 개발, 정책 델파이, 정보의 충분한 획득 등은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되고, 민감도 분석은 소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한다.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
<p>(1) 적극적 방안 :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p> <p>① 모형이나 이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② 다른 기관과의 흥정이나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을 통제한다. ③ 의사결정을 늦추면서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충분히 획득한다. ④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의 제반 분석기법을 활용한다.</p> <p>(2) 소극적 방안 :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p>

- ① 보수적 접근방법(conservation decision, 최소극대화기준) : 불확실성 하에서 나타날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리라고 전제하고, 이 전제 하에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② 가외성 장치 : 위험발생의 사태에 대비하여 중첩성·중복성·동등장재력 등 가외성 장치를 마련한다.
- ③ 민감도분석 :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 ④ 상황의존도 분석 :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다.
- ⑤ 악조건 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서 분석한다.
- ⑥ 분기점 분석 :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이다.
- ⑦ 복수의 대안 제시 :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375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 ① 강의(lecture)
- ② 액션러닝(action learning)
- ③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 ④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정답> ③

해설> ③ [O] 설문은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조직발전(OD)의 핵심기법에 해당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754, 849

[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정답> ①

해설> ① [X]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유동적이고 불안정적인 경쟁·갈등 관계로 가정한다.

정책과정과 네트워크(새행정학2.0)

(1)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위들로 특징지어지는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정정길).

(2) 네트워크 분석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밀도와 중심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점, 선, 그리고 파라미터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표현한다.

(3)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기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차이가 있다.

① 미국의 경우 1960년대의 하위정부 모형과 1970년대 후반의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기원으로 했지만, 영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했다.

② 미국에서 헤클로(Heclo, 1978)는 폐쇄적인 상호작용 구조를 다루는 하위정부 모형을 비판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이슈네트워크 모형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부부처의 고위관료, 의원, 기업가, 로비스트, 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즉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이다.

③ 영국에서는 로즈(Rhodes, 1997)가 정책네트워크의 유형화를 시도했는데, 특히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정책공동체와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이슈네트워크를 대표적인 모형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정모형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 삼자연합) : 정부관료, 의회상임위, 이익집단 (미국)
가변모형 (공동체모형)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 전문가 중심의 공동체 (영국)
	이슈공동체(Issue Network)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미국, 영국)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 2017 비전행정학 p.314

[7]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 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정답> ④

해설> ④ [O] 설문은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요 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 격	근무환경요인 또는 직무맥락 (물리적 · 환경적 · 대인적 요인)	직무요인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
예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개인상호 간의 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 상호간의 관계) 등	성취감(자아계발), 책임감, 인정감, 안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 심리적 요인

▶ 2017 비전행정학 p.507

[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정답> ①

해설> ① [X]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제정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기능)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결권 *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5조)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 ·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서류제출 요구권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4) 청원의 수리 · 처리권 (5)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 응답권 (6) 선거권과 피선거권 (7) 의회의 자율권 (8) 발의권(發議權)	(1) 통할대표권 (2) 사무의 관리 · 집행권 (3) 사무의 위임권 (4) 지휘 · 감독권 (5) 규칙제정권 (6)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7) 선결처분권 (8) 재의요구권 (9) 기 타 ① 발의권 ② 임시회소집 요구권 ③ 예산안 편성 · 제출권 등

▶ 2017 비전행정학 p.1256

[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정답> ④

해설> ④ [O]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① [X]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LIBS), 성과주의 예산제도(PBS)가 있다. 계획예산(PPBS)이나 영기준예산(ZBB)은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된다.

② [X] 단절균형모형은 전쟁이나 대공황과 같은 이유로 인한 급격한 단절(큰 폭의 변화) 후에 다시 균형을 이룬다는 모형이다.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③ [X]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 자신들의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예산과정상의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의 비교>

구 분	점증주의(정치원리)	총체주의 · 합리주의(경제원리)
거시적 과정	당파적 상호 조정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미시적 과정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결 과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신규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초 점	정치적 합의와 동의	예산상의 편익(사회적 총효용) 극대화
기 준	균형화 원리(게임 원리)	최적화 원리, 효율적 자원배분(파레토최적)
방 법	정치적 타협과 흥정(muddling through)	B/C 분석 등 분석적·계량적 기법의 활용
방 향	미시적 · 상황적	거시적 · 하향적(단, ZBB는 미시적·상향적)
대안의 탐색	제한적 탐색	완전하고 포괄적 탐색
권력체제	분권적 체제(다원주의)	집권적 체제(권위주의)
가용자원	소폭의 증감시 유용	큰 폭의 증감시 유용
목표수단분석	미 실시	실시(목표는 주어진 것, 목표와 수단은 분리)
특 성	보수적, 현실적, 실증적	쇄신적, 혁신적, 이상적, 규범적
개혁목표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예산배분의 효율
적용분야	· 준공공재, 재분배정책 · 계속사업에 대한 적용가능성 높음 · 거시적 문제	· 순수공공재, 분배정책* · 신규사업에 대한 적용가능성 높음 · 기술적 · 미시적 문제**
예산제도	LIBS, PBS 등	PPBS, ZBB 등

* 분배정책이나 순수공공재는 비교적 갈등이 없으므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다.

** 합리주의는 (대체로) 거시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분석대상은 미시적 문제(수단)이다. 이것은 합리주의가 목표 ·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목표-수단분석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1023

[10] 정책평가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 ③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한다.

정답> ③

해설> ③ [O] 무작위 배정에 의한 진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① [X]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신뢰성은 타당도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② [X]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CIPP모형이란 스테플빔(Stufflbeam)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설계, 획득,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평가모형인데, 맥락(또는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의미한다.

④ [X] 허위 · 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는 내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이다.

CIPP모형(Stufflbeam)
<p>(1) 의 의</p> <p>① CIPP모형은 스테플빔(Stufflbeam)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설계, 획득,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상한 평가모형이다. 맥락(또는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로 구성되어 있다.</p> <p>②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p> <p>(2) CIPP 단계</p> <p>다음의 4단계 활동이 순환적 의사결정 및 정책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p> <p>① 맥락(상황: Context) 평가 단계 : 조직의 요구, 문제, 상태 분석을 통해 목표설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p> <p>② 투입(Input) 평가 단계 :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 자원을 수집하는 단계이다.</p> <p>③ 과정(Process) 평가 단계 :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와 관련된 단계이다.</p> <p>④ 산출(Product) 평가 단계 :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성과를 측정 · 해석 · 판단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총괄평가와 관련된 단계이다.</p>

▶ 2017 비전행정학 p.451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O]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① [X] 기존의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어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었다(2015).
- ② [X]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그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및 각각의 정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 ③ [X]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종 류	개 념	재 원	용 도	교부주체
보통교부세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입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자원	행정자치부장관
특별교부세	-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 ① 기준재정수입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40/100) - 행자부장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50/100) - 국민안전처장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실적 우수 시 등 교부(10/100) - 행자부장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 자원	행정자치부장관 or 국민안전처장관
부동산 교부세	-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稅收)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증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자원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안전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정산액	특정 자원	국민안전처장관

*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 증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 2017 비전행정학 p.1301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나, 라

정답> ②

해설> ② 가, 다은 옳은 내용이고, 나, 라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나. [X]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라. [X]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5년 이내)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경력직(經歷職)	특수경력직
<p>(1) 일반직 공무원</p> <p>①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②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1급에서 9급으로 구분(다만, 연구직과 지도직은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의 2계급으로 구분)</p> <p>(2) 특정직 공무원</p> <p>①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부장 이하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p> <p>②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신분보장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지만, 담당 직무의 특수성으로 자격요건·계급·복무규율·정년·보수체계 등을 별도로 규정</p>	<p>(1) 정무직 공무원</p> <p>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p> <p>②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p> <p>③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장·차관, 처장, 청장, 기타 차관급 공무원</p> <p>⊕ 경찰청장·검찰총장은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p> <p>④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감사원의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등</p> <p>(2) 별정직 공무원</p> <p>①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p> <p>② 차관보, 국회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광역시와 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 등</p> <p>⊕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1급 상당)이고,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2급)</p> <p>⊕ 최근 감사원법 개정으로 별정직이었던 감사원 사무차장이 일반직으로 변경되었다(2015).</p> <p>⊕ 최근 법개정으로 별정직이었던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일반직으로 변경되었다(2016).</p>

▶ 2017 비전행정학 p.797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의 장점인 유연성 · 자율성 · 전문성 · 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 · 감독 체계에 수평적 지시 · 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유형이다.

- ①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 ②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 ③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한다.
- ④ 조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 배분 · 이용한다.

정답> ①

해설> 설문은 매트릭스 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매트릭스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조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 ① [X]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낮아진다.

<매트릭스 구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속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과적인 구조이다. ②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직구조이다. ③ 매트릭스구조 내 조직구성원들을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조직은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개인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더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④ 이는 조직구성원의 직무 동기부여에 기능적으로 작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중 권한체계가 개인에 미치는 혼란, 갈등, 좌절이 있을 수 있다. ② 특히,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높다. 이 결과 갈등해결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불가피하다. ③ 많은 조직에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적절한 권력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④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

▶ 2017 비전행정학 p.567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 ④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정답> ③

해설> ③ [X]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 관련 규정
<p>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 등)</p> <p>① 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p> <p>②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p> <p>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p>

▶ 2017 비전행정학 p.799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p>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p> <p>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p> <p>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p> <p>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p>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④ [O] 모두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들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17, 74, 97, 129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전달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유형은 조직 내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형태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상황판단의 정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중심적 위치(구심성: centrality)를 차지하는 단일의 리더는 없다.

- ① 원(circle)형
- ② 연쇄(chain)형
- ③ 바퀴(wheel)형
- ④ 개방(all channel)형

정답> ④

해설> ④ [O] 설문은 개방형(all channel, 전체경로형, 星型)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개방형(all channel)은 구성원 누구나 모든 사람과 종적 · 횡적 · 대각선적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에서 나타나며 의사소통의 신속성은 낮으나 환류성과 정확성은 높다.

<의사전달망의 유형>

네트워크 조직행위	직선형 (연쇄형, 사슬형)	바퀴형 ¹⁾ (윤형)	원 형	개방형 ²⁾ (전체경로형)
권한의 집중도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의사전달의 속도 ³⁾	중간	· 단순과업 : 빠름 · 복잡과업 : 늦음	· 모여 있는 경우 : 빠름 · 떨어져 있는 경우 : 늦음	느림 ⁴⁾
의사전달의 정확성	· 문서 : 높음 · 구두 : 낮음	· 단순과업 : 높음 · 복잡과업 : 낮음	· 모여 있는 경우 : 높음 · 떨어져 있는 경우 : 낮음	중간
집단의 만족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의사결정의 속도	빠름	중간	느림	-
결정에 대한 집단의 몰입 정도	낮음	중간	높음	-

1) 바퀴형(윤형)은 집권화된 기계적 구조에서 주로 나타나며, 의사소통의 신속성은 높으나 환류성과 정확성은 낮다.

2) 개방형(전체경로형)은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에서 나타나며, 의사소통의 신속성은 낮으나 환류성과 정확성은 높다.

3) 오석홍 교수는 의사전달의 연계점이 적고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직위가 매우 뚜렷한 의사전달망인 바퀴형이 의사전달의 신속성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창원·최창형 교수는 개방형(전체경로형, 완전연결형)이 의사전달이 신속하고, 윤형은 단순과업일 경우에는 빠르나 복잡과업일 경우에는 느리다고 설명한다.

4) 창의성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형이 오히려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강신규 외).

▶ 2017 비전행정학 p.678

[17]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용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④

해설> ④ [O] 계속비(繼續費)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정부의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總額)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① [X]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을 말하는데, 집행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X]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X]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 - 목 간의 용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 2017 비전행정학 p.1088, 1093

[18] 우리나라의 관료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 ㄴ.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 ㄷ.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 ㄹ.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② ㄱ, ㄹ은 옳은 내용이고, ㄴ, ㄷ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ㄴ. [X]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할거주의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ㄷ. [X]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만,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2017 비전행정학 p.33

[19]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0조).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이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예산안 편성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 국회에 (정부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의 예산 심의 완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2017 비전행정학 p.1071

[2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② 사무직원은 지방议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1. 별정직공무원
 -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 2017 비전행정학 p.1254